

아찔했던 5호선 방화, 문 연 시민과 불연재가 참사 막았다

승객이 문 열고 선로 대피해…기관사도 직접 진화 나서
불연재 차체도 확산 막아…보안영상 관계 한계는 과제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 사고는 차량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승객들과 기관사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서울 영등포소방서가 제공한 영상에는 연기가 자욱한 어두운 터널 안에서 승객들이 선로를 따라 한 줄로 질서 있게 걸으며 대피하는 모습이 담겼다. 승객들은 마스크나 웃기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침착하게 걸어갔다. 일부 승객들은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앞쪽을 비추며 안내하며 서로를 도왔다.

이날 오전 8시43분께 여의나루~마포역 사이를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인화성 액체를 뿜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며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이 중 21명이 연기흡입·찰과상·발목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화재 당시 출입문을 수동 개방하고 대피를 유도한 승객 신은철(53)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람들이 물려와 칼부림 난 줄 알았다. 휘발유 냄새가 퍼지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문 앞에 있던 승객이 비상장치를 돌렸고, 내가 문을 열었다. 수십 명이 마포역 방향으로 뛰어 나갔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시 상황을 전하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한 승객은 “뒤에서 까만 연기가 밀려오자 ‘문 열어’, ‘살려줘’ 외침이 이어졌고 몇몇 사람은 공포심에 울었다. 이내다 실시사하는구나. 공포가 확 물려왔는데 문이 열려서 다음역까지 달렸다”고 적었다.

열차는 불연재 소재로 제작돼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약 20분 만에 초기 진화가 이뤄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해당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는 승객 비상전화를 받고 직접 불이 난 객실로 이동해 승객들과 함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이로 인해 “불이야!” 외침에도 운전실 문이 닫혀 있었던 증언과 방송 안내가 미흡 등으로 일부 승객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화재를 낸 A씨는 범행 직후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 여의나루역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는 도중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적발되면서 범행을 시인, 현장에서 이날 오전 9시45분께 체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한 접화기는 ‘고깃집 라이터’로 불리는 가스 접화기였다고 밝혔다. A씨는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뿐만 아니라 해당 가스 접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6월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2003년 192명이 숨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와 유사한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침착한 대피와 제도적 안전장치 덕분에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다만 영상 관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 열차에는 객실 내 보안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영상은 운행 중 관제센터나 역무실로 실시간 전송되지 않았다. 차량기지에 도착해야만 영상 회수 가능해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객실 내 보안 영상을 용량 문제 등으로 실시간 관제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영상은 필요 시 사후 확인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

다”고 해명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003년 대구 참사 이후 불연성 내장재 교체, 화재 감지기 및 소화기 다수 비치, 수동 개방 방식 안내 등 안전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며 “이번처럼 대피 영상이 공개된 계기를 삼아 기관사·역무원·승객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길승호 기자



신바람 난 동심

초여름 더위가 덮친 1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체장 미달 ‘어린 꽂게’ 불법판매…유통업체 8곳 압수수색

목포해경 거래장부 등 혐의 입증 증거 확보

목포해양경찰서가 체장 미달인 어린 꽂게를 불법 유통·판매한 유통업체 8곳을 압수수색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수산자원관

리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유통업체 등 8곳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또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

중이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약 4t 규모(4000만 원 상당)의 체장미달 꽂게와 거래 장부 등 혐의가 입증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

범행에는 20여척의 꽂게잡이 어선과 어획물 운반선,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상인이 불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어선에서 체장 기준 6.4cm 이하 꽂게를 포획해 운반선에 싣고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은 채 중매인을 통해 밀거

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체장 6.4cm 이하 꽂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운반선 선장과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포획·유통·판매 망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금호타이어 화재대응’…광주 광산구 ‘노사민정 공동 참여’ 오늘 대책회의

광주 광산구는 2일 오후 2시 광산구청 상황실에서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 대책회의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대책회의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에 따른 경영 위기, 고용 불안, 주민 피해 등의 문제를 지역 연대로 풀어보기 위한 비상 대응 기구다. 노동계, 기업·경제, 시민사회,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회 등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23명이 참여한다.

대책회의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연대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 ▲주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지역 경제 상생 발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비롯



한 법정부 지원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모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주민 피해와 일상 회복, 고용 불안 해소와 공장 종사자 생계 안정, 지역경제 침체극복 등 산적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지역 노사민정의 역할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